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래 투자입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생애 초기의 경험은 인지·정서·사회성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학습 능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보육 접근성을 크게 높여 왔으며, 이제는 ‘교육·보육 지원 확대’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교육부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 하에서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먼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예비비를 활용하여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4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특별 회계를 신설하여 영유아 대상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무상교육·보육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공성의 실천입니다. 영유아교육·보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큼, 부모는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육의 질은 결국 사람에서 나옵니다. 교사가 돌봐야 할 아이 수가 줄어들수록 상호작용의 깊이가 높아지고, 놀이 중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근무 형태 및 가정 구조의 다양화로 인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야간연장·아침돌봄·시간제 보육 등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지역과 연계한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5세 이음교육’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를 위한 국가지원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생애 초기의 교육·돌봄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며, 장래의 학업 성취, 사회적 안정,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 인구 구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출생률 감소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입니다. 국가가 교육·보육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할 때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모든 아이는 공평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돌봄 시각지대 해소,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도약입니다.

미래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책임에 기반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의 길을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